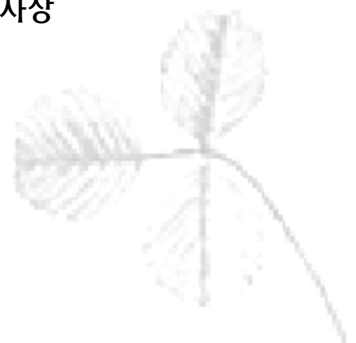




■ 발 표 2.

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와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이 은 애
SEEDS
이사장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제정과 사회적 투자 기금 조성

이은애(seed's 대표)

최근 탐욕적 금융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월가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 대 99%' 논쟁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담론 선점 경쟁이 한창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다.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에서 보호주의 경제체제로의 '거대한 전환' (Polanyi, 1944)을 거쳐,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거치며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로 인해 Post-Capitalism의 존재양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Ouchi(1980)나 Adler(2001)가 제기해 온 신뢰(Trust)를 매개로 하는 호혜적인 커뮤니티(Community)형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기업' 등 경제용어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일 반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기반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부문을 말한다,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체로서, 각종 생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기업·비영리조직의 대안경제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1) 조례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제2조)

-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함
-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등을 말함
-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함
-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함

나. 거버넌스 (제3조, 제4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대표 등 현장활동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함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의 기능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조직 발굴·지정 및 지원 사항, 도·시군·유관기관·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조직의 발굴 및 육성,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제7조)

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각종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서 정함 (제9조~11조)

마.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함 (제12조)

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도, 시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음을 정함 (제13조)

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그 기능을 정함 (제16조)

2) 조례 제정 의의

그간 주민참여형 지역고용 및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외에도 행안부 마을기업,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경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체(2011.4.30 종료),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기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서별로 정책과 예산의 칸막이 행정이 추진되면서 각각의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연대는 물론 통합적인 지역개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는 2010년말,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단위 내에 '사회적경제TF'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 및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사회적경제 경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2011년 4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 학습회 및 정책 개선과제 합의, 차기년도 정책예산 설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로의 전환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국내 최초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률적 개념과 범주를 합의하고, 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중앙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들을 道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경영하는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거버넌스 조직의 개편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호혜적·연대적 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재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림으로써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군 및 현장과의 협력체계를 강화 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전환 배경 및 추진경과

2007년, 충남의 권역별 지역총생산액(GRDP)은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이 68.1%를 차지하며, 2005년 이후로 남북 지역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충남 전체 생산액의 43.7%가 역외로 유출되고 이중 50%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도 사회양극화 심화 및 기존 산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지역 불균등 발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적기업(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마을기업(2008년 행안부 주도의 희망근로에서 전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2012.12 시행 예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중에 있다.

이에 2010년 하반기, 민선 5기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통합과 사회적기업 정책의 개선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및 사회적경제연구회 운영,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설립 등이 추진되기에 이른다.

가.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 민민·민관 간의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및 비전공유 창구화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였던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를 시행하며 개방형 연구모임 형태로 개시되었다.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공무원, 도의원,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 활동가, 시민사회운동가들의 개방적 참여하에 공동의 학습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국내외 우수사례 연구·충남지역 사회적경제의 특성 및 발전방향 모색·사회적경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을 협의하였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형태로 계속 운영중에 있다.

나.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운영

2011년 4월, 충남의 사회적기업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도지사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 등에서 제기된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를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설립이 제안되어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한시조직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획단'을 설치하여, 단기

정책과제 도출과 사회적경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사회적경제협의체 대표·지방의회 의원·주요 관련부서 공무원·충남발전연구원·중간지원조직·연구자 등으로 구성하여 초기에는 주1회 이상 긴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당초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를 운영기간으로 계획하나, 2012년 4월 조례 제정시 까지 연장 운영하고, 기획단 활동 종료 시점에 맞추어 충남도 사회적경제 관련한 상설적 거버넌스인 '(가칭) 충남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승계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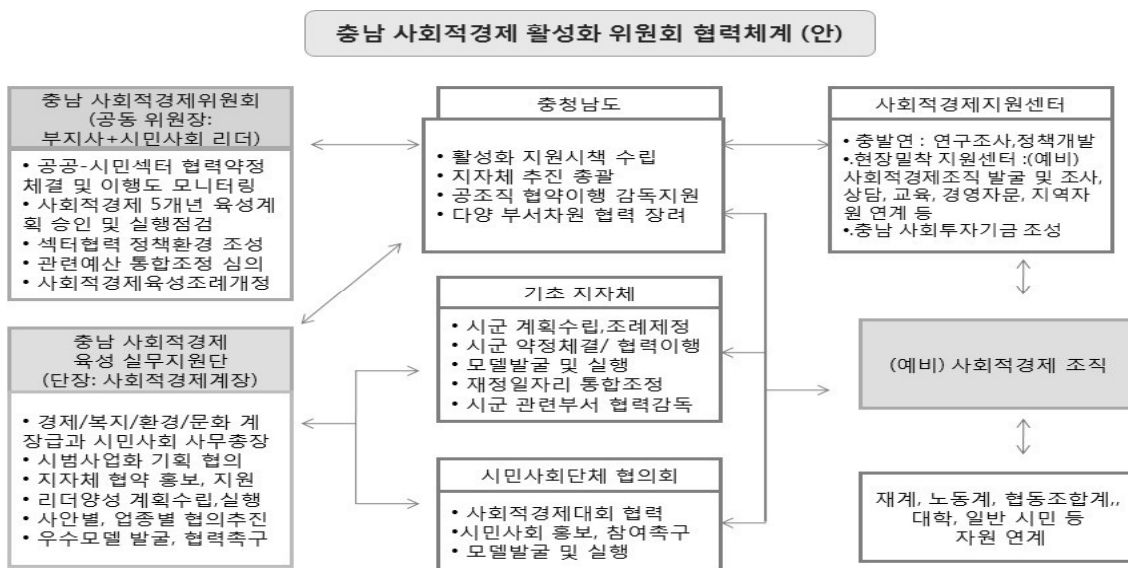
주요 추진업무로는 사회적경제 정책 정책 설명회 및 공무원 교육·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방향 도출 및 제안 · 충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행정 추진체계 개선안 제안· 중간지원조직의 발전전략 검토 및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12 사회적경제 전국대회 개최 지원· 2012년도 중점 과제 및 예산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등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TF를 통해 충남도 시책사업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유관사업의 리스트도 마련되어 연계를 위한 활동이 모색중에 있다.

4) 사회적경제 전환의 성공요인

A.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리더의 이해 높음

민선 5기 충남도지사 및 새로운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취임 이후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이 화두가 되고, 사회적경제 진영의 자조역량 강화와 활성화가 강조되는 새로운 관점이 수립되면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림 1> 충남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도 및 협력체계(안)



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 수단에 머물렀던 충남의 사회적기업의 실태 및 지원정책들을 재평가 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실업대책 차원을 넘어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지역격차 해소·지역고용 확충·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위상 부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12년도 도정 목표도 「성장지향형」에서 「행복지향형」으로 충남경제 패러다임 전환 : 내발적 발전, 균형성장과 지속성장, 사회적경제 개념 도입'으로 제시되는 등 변화가 시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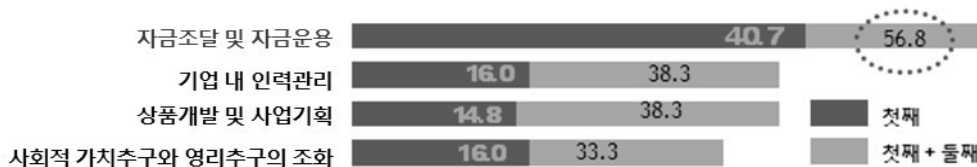
D. 홍성 풀무생협의 55년의 실천사례가 있었기에 가능

충남지역은 전국 제일의 농업법인 소재지로서, 향후 협동조합법 시행시에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현존하는 사회적경제의 50% 이상이 농업 및 가공유통업으로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높고, 고령화와 다문화가 급속한 농어촌 지역에서 관련 활동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는 지역고용 이외에 자본조달·원자재 수급·등에서 지역성 확보는 미미하거나 확인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생태계 구축 방안도 중앙정부와 매칭편드하는 재정지원 이외에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도비 편성이나 시장조성 등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진영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섹터와의 협력도 아젠다 공유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역기업들의 연계도도 낮은 상태여서 향후 충남도 및 시군 수준에서의 자본조성과 시장조성의 핵심과제를 안고 있다.

2. 충남 사회투자기금 (Social Investment Fund)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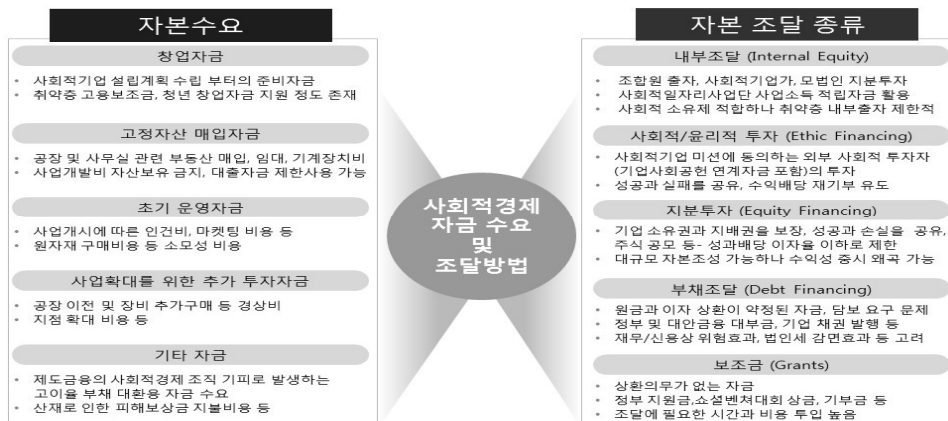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고 실질적인 정책사업들이 모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열거해보면 서울시·경기도·충남도·경남도·강원도·전북도·서울 성북구·서울 은평구·서울 금천구·경기 부천시·경기 수원시·경기 고양시·충남 아산시·충남 서천시·강원 원주시·전남 완주군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이들 지자체 정책의 공통된 특성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정책간 통합성 강화, 개별기업의 경쟁력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을 병행, 획일적 인건비 지원이 아닌 기업생애주기별 맞춤지원 모색, 다양한 사회주체간 사회적자본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강화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2009, 한겨레경제연구소)



반면 이들 지자체 사이에는 정책의지 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환경차이가 존재하는 바, 사회적경제 인재풀의 유입율, 재정자립도 및 시도비 편성예산 규모, 기업사회공헌자금등 섹터간 연계자원 규모,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시장 구축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도비 편성예산을 살펴보면 10억 미만서부터 400억원대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고 보조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 조성 정책 이외에 별도로 지역별, 특히 비수도권 지방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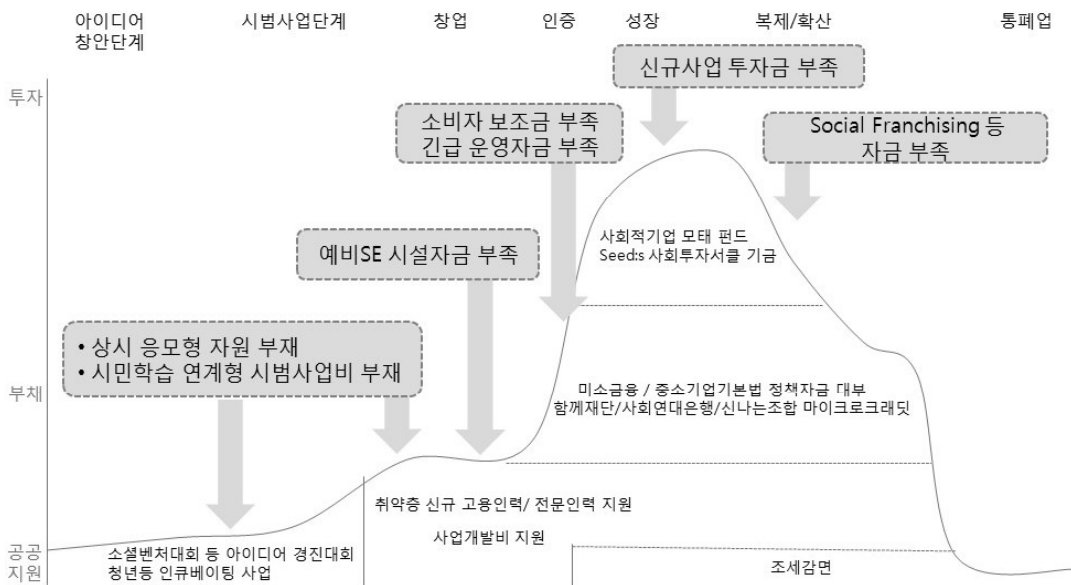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수요 및 조달방안



현재 국내의 사회적 자본시장은 파일럿 기금 정도가 출현하여 운용되는 초기 진입기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창업과 성장, 확산 단계에 필요한 사회투자 기금 운용이나 전문 금융기관의 출현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아래 그림5에서와 같이 상시 제안가능한 사업자금 부재·창업단계 시설장비 구입자금 부족·취약층 소비자들의 지불비용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공익사업과 지속 가능성 충돌·성장기 기업들의 신규 사업분야 투자나 모델 확산 자본 조달의 어려움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하여 사회적 투자 원리를 적용하며 자본조달을 돕는 지역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투자기금은 지역사회 공유자산 확충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함께 사회통합과 사회혁신 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게 Patient & Long term Fund 방식으로 운영되고, 창출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익을 재투자 해나가는 새로운 금융을 의미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경기침체와 지역격차 문제가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혁신 과제임을 상기해 볼 때, 충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재생형 사회투자 기금의 구성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협력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다.

<그림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별 자본수요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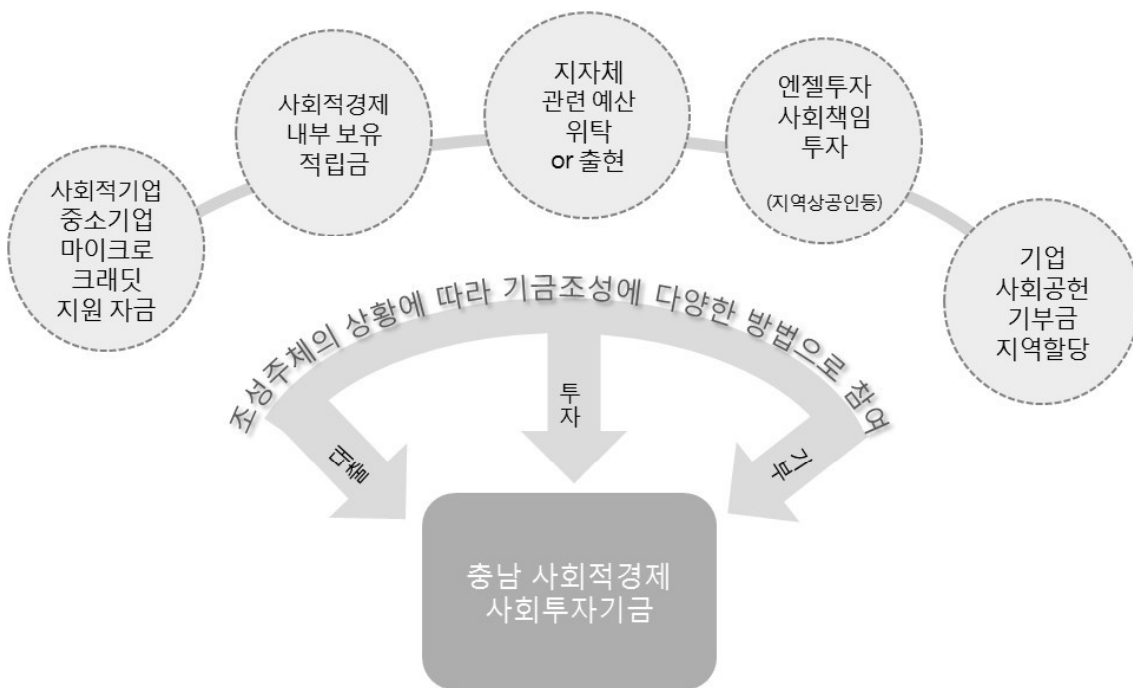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공적기금들에서 보였던 정부 출현재원 의존 및 기업 기부 의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복합체가 발달하고 지역경제에서 파급력이 높은 스페인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 볼로냐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주 등을 보더라도 지역수준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의 기금조성과 사회투자형 금융조직을 만들어 자조적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개별 기업 수익의 3%에서 45%를 사회적경제연합체 산하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공동의 인재양성과 R&D 투자, 신

규 사업자 창업자금 대출 및 투자, 그리고 위기 사업체에 대한 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도 내부보유 중인 수익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별·업종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과정에 사회투자하으로써 기금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금이 '현장에 적합한 인내자본'으로 기능하도록 견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6>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기금 조성방안



중앙정부 역시도 이러한 지역기금들이 고용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자펀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들로 확대하고, 펀드조성 노력에 따라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대응투자 하는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현재 휴면예금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이는 미소금융기금의 운용방식도 혁신하여 휴면예금의 지역기금 할당제 도입, 지역기금에 대한 사회적기업 자금대출 위탁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종교기관 및 민간재단에서는 이미 보유기금의 15~25%를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자산 투자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성과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활동)와 연동하여 운용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에 공익재단들과 시민들이 자산운용시에 사회성·수익성·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책임투자펀드 가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투자 견인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사회공헌 역시 전략적 기부 확대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투자형 지역기금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이 글을 마친다.

별첨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318호, 2012.7.30,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정책과)02-731-22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정책과장 및 예산담당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투자 및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18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